

# 1988年度 經濟運用計劃과 새 政府의 主要改革 推進課題

經濟企劃院

〈目 次〉

- I. 88年 經濟運用計劃
  - 1. 今年度 經濟展望
  - 2. 主要 經濟政策方向
- II. 새 政府의 主要改革 推進課題
  - 1. 改革推進의 基本目標
  - 2. 重點推進課題

- 이에 따라 3,450弗의 1인당 GNP, 35萬名 수준의 新規雇傭 창출

- 작년도 勞使紛糾의 영향으로 기업의 勞動節約的 投資增加가 예상되어 成長의 雇傭吸引력은 감소될 전망
- 技術開發投資의 확대로 高學歷者의 就業機會 확대

	86	87	88
○ 國民總生産(億弗)	953	1,180	1,450
(1人當GNP, 弗)	(2,300)	(2,813)	(3,450)
○ 雇傭增加(千名)	535	849	354
○ 失業率(%)	3.8	3.1	3.7

## I. 88年 經濟運用計劃

### 1. 今年度 經濟展望

- 輸出과 內需의 均衡을 도모하면서 經濟成長은 8%수준이상 달성

(不變增加率, %)

	86	87	88
○ 經濟成長	12.3	12.2	8.0
• 總消費	7.3	8.1	8.0
• 固定投資	15.4	13.5	9.5
• 輸出(經常)	27.7	36.2	16.3 <sup>1)</sup>

1) 單價上昇率 8% + 物量增加率 7.7%

- 國際收支 黑字規模를 70億弗로 축소

- 貿易收支 黑字規模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주력
- 輸出은 550億弗 수준 전망
- 總外債는 310億弗内外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億弗)

	86	87	88
○ 經常收支	46	98	70
• 貿易收支	42	77	50
(輸出)	(347)	(473)	(550)
(輸入)	(316)	(410)	(520)

• 貿易外 및 移轉收支	4	21	20
○ 總 外 債	445	356	310
○ 對 外 資 產	120	132	155
○ 純 外 債	325	224	155

註：輸出入은 通關基準임.

- 物價는 도매 3%, 소비자 5% 수준으로 안정
  - 지난 연말이래의 物價不安定心理를 조기에 수습
  - 에너지價格의 인하, 관세인하, 환율절상요인 등 物價安定要因을 최대한 활용  
(前年末對比, %)

	86	87	88
○ 都 賣 物 價	△2.6	2.7	3水準
○ 消 費 者 物 價	1.4	6.1	5水準

## 2. 主要 經濟政策方向

### 가. 物價安定基調의 조기회복과 不動產投資의 根絶

#### 〈當面課題〉

- 黑字轉換期에 발생하고 있는 物價不安要因에 구조적으로 대처
- 政府가 申訴하여 安定努力을 강화하고 衡平增進을 위한 施策도 安定테두리 내에서 추진
- 財政·金融의 緊縮運用 등 安定施策에 政府가 申訴
  - 향후 總通貨增加率을 18% 수준에서 관리
    - 黑字規模를 실질적으로 축소하여 海外部門 通貨壓力 완화
    - 通貨還收過程에서 大企業 與信管理를 강화하여 中小企業의 資金梗塞 최소화
  - 전년도 歲計剩餘金中 5,000億원을 韓銀借入金 상환에 充당
  - 公共料金は 당분간 引上을 동결
- 工產品과 生必品價格安定을 주축으로 한部門別 物價管理 강화
  - 에너지價格, 관세 및 특소세율 인하여인을

- 工產品價格의 安定 또는 인하여 반영
- 農水産物中 국민대다수의 基本적 生必品價格은 우선적으로 安定
- 소득보상요구나 인플레이心理에 편승한 가격 및 서비스요금인상의 억제

- 不動產投機의 根絶
  - 不動產轉賣로 발생되는 投機所得은 철저히 課稅로 회수
    - 讓渡所得稅,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전면적으로 현실화
  - 價格上昇을 기대한 不動產過多保有를 억제
    - 負債가 많은 企業의 경우 時急을 요하지 않는 不動產買入을 억제
    - 非課稅 및 減免規程을 대폭 축소
  - 住宅供給과 工場用地 조성확대로 需給隘路를 방지

### 나. 國際收支 黑字管理의 對外通商協力基盤 강화

#### 〈當面課題〉

- 지난해 보다 黑字規模를 실질적으로 축소하여 黑字過多時 과생되는 物價不安, 産業構造調整 지연, 換率의 급격한 切上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 開放擴大에 따라 과생되는 國民계층간의 利害問題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조치와 構造調整努力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國民의 合意를 유도
- 貿易收支 黑字規模를 실질적으로 축소(87年 : 77億弗→88年 : 50億弗)
  - 수입개방의 확대와 既自由化된 品目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 철퇴
  - 關稅率 構造의 전면 개편
- 民間의 外換去來 및 保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經常外換去來를 대폭 자유화
  - 個人送金등의 형태로 유입되는 投機性 外貨 資金 流入억제
- 換率은 競爭國 등 主要通貨時勢와 黑字發生 추이를 감안하여 운용

- 對外開放擴大를 위한 國民的 合意基盤 조성
  - 쇠고기, 담배, 知的所有權 문제 등 通商摩  
擦의 원만한 타결을 모색하되, 對內的인보  
완조치를 강구
  - 國民生活向上과 직결되는 消費財 輸入의 문  
호 개방
  - 해외여행의 자유화

#### 다. 勞使紛糾 增進으로 產業平和基盤 構築

##### 〈當面課題〉

- 勞動 3 權을 보장하는 새로운 法體系內에  
서 모든 勞使紛糾가 法秩序를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관행 정착
- 금년 3~5月的 임금조정과정에서 物價不  
安을 파생시키지 않으면서 勤勞者福祉가  
개선될 수 있도록 勞使雙方의 공동노력  
필요
- 勞使共榮의 母體가 되는 企業事情의 公開와  
이해증진 노력
  - 企業은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利益配分의原  
則에 대한 근로자측의 理解 도모
    - 賃金引上은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業種別  
• 企業別 경영상황에 맞게 差等 조정
    - 支拂能力을 초과하여 價格引上을 초래하  
는 賃金調整 지양
  - 賃金協商開始 이전에 勤勞條件 및 作業環境  
改善과 관련되는 근로자들의 隘路要因을 적  
극 수용
- 새로운 法體系에 맞는 勞使交涉方式의 조기  
정착
  - 건전노조의 육성을 통하여 勞·勞紛爭요인  
을 최소화
  - 社會指導層이 참여하는 任意調整制度의 활  
성화(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제도화)
- 指導層을 포함한 一般國民들의 勞使安定에 대  
한 共感帶 형성
  - 勞使公益代表로 구성된 中央勞使 協議會의  
활성화

- 勞動 및 賃金問題에 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수준을 제시하고 장단기 전략을 발전시  
킬 수 있도록 「韓國勞動研究院」설치
- 지방단위로 地方勞働界, 企業界, 學界, 言  
論人 등이 참여하는 公聽會·討論會 개최

#### 라. 基本的 福祉施策의 內實化

##### 〈當面課題〉

- 今年에 실시한 農漁村 醫療保險制를 조  
기 정착시키고 내년도 都市地域 확대에  
대비한 關聯制度 개선
- 低所得層 지원은 自立基盤造成과 貧困의  
세습화 방지에 주력
- 農漁村 醫療保險의 조기정착
  - 政府支援의 추가를 계기로 保險料와 自己  
負擔體系 조정
  - 건전한 組合財政運營을 위하여 「保險財政  
安定基金」을 설치 운용
  - 모든 保險患者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患者依  
賴制度和 합리적인 醫藥分業制度를 마련(내  
년초 都市地域 확대에 대비)
- 國民年金制度의 착실한 시행
  - 조성된 기금은 庶民住宅建設, 中小企業育  
成 등을 위한 投·融資財源으로 활용
  - 90年代初 이후에는 農漁民·自營業者 등 모  
든 國民이 가입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발  
진
- 低所得階層의 생활향상 지원
  - 職業訓練 및 長期低利의 生業資金融資 확대  
등을 통하여 自立基盤 조성을 촉진
  - 全體 零細民 子女에 대해 實業系高校까지  
학비지원
  - 障碍者 福祉綜合對策機構를 설치하여 教育  
· 醫療 및 就業支援 시책을 강화

## II. 새 政府의 主要改革 推進課題

### 1. 改革推進의 基本目標

- 우리經濟가 앞으로 5년동안 활력을 유지함으로써 經濟先進化와 併行하여 부문간 不均衡을 축소하고 分配衡平을 제고하여 보통 사람들이 골고루 잘사는 「先進·和合의 經濟」를 이룩하기 위하여

첫째, 民間經濟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간섭을 축소하여 自律·創意·責任을 토대로 하는 「自律經濟」체제 확립

둘째, 공정한 競爭原理를 확립하여 成果의 배분과 富의 축적에 대한 正當性을 道德性을 확보하여 「公正經濟」질서 확립

셋째, 地域間·部門間·階層間 균형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均衡經濟」의 실현

네째, 國際經濟秩序의 형성에 被動的 受容者가 아닌 能動的 主體로 참여하는 「國際協力經濟」지향

- 새 政府는 이상과 같은 基本目標下에 經濟安定基調의 태두리 내에서 주요 公約事業 실천을 위한 改革作業을 내실있게 추진

## 2. 重點推進課題

### 가. 政府規制의 완화와 國民의 參與機會 확대

(1) 民間의 自律과 競爭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

- 企業에 불편을 주는 經濟法令의 정비  
○ 企業設立 및 시설확충 등과 관련한 規制節次의 대폭 정비

- 企業에 대한 直·間接 負擔의 축소  
○ 非自發的 準租稅의 폐지  
○ 認·許可 등과 관련된 각종 負擔金賦課 減

- 產業別 競爭制限의 단계적 완화로 競爭體制 확립

○ 參入制限 등 각종 競爭制限法令 및 行政慣行 改

○ 企業活動을 제약하는 事業者團體機能 개선

- 國民生活에 불편을 주는 규제적 節次의 대폭 축소

○ 國民생활관련 民願書類 徵求 및 절차를 國民편의위주로 과감하게 개편

※ 關聯民間團體로 하여금 隘路事項을 건의토록하여 추진

(2) 政策決定過程에의 民間參與 확대와 公開行政 지향

- 주요 政策決定時 利害當事階層으로 위원회 구성  
○ 對政府 건의 활성화

- 關聯情報의 共有의 政策決定過程의 최대한 공개

(3) 自律과 競爭을 바탕으로 한 金融產業改編 추진

- 金融通貨運營委員會 기능의 활성화 등 通貨信用政策의 中立性 제고

- 金融機關 經營의 자율성 제고

○ 인사·경영 등 内部經營의 자율성 보장

○ 금융기관의 貸出審査分析機能 강화

○ 金利 自由化幅 확대 등 금융부문의 價格機能 제고

○ 大企業에 대한 政策金融의 축소

- 金融機關間의 競爭

○ 銀行圈과 第2 金融圈間의 균형발전 도모

○ 금융기관별로 特性있는 固有業務領域을 정비·보장

○ 事後 監督體制의 강화로 金融產業의 건전발전 도모

(4) 民間經濟團體와 各급 기관운영의 自律과 責任 확대

- 民間團體 등의 人事 및 運營에 대한 간섭배제  
○ 農·水·畜協 및 農組의 민주화

○ 各급 민간단체운영에 있어서의 自律性 보장

- 各 部處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自律幅 확대

### 나. 經濟運用의 衡平性 제고와 所得分配 개선

(1) 所得分配 개선을 위한 稅制의 개편

- 中產層以下 所得階層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 勤勞所得特別控除 및 소득세의 累進構造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勤勞者의 稅負擔안화
- 大衆消費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率 인하
- 부가가치세 課稅特例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零細事業者의 稅負擔 경감
- 資産所得에 대한 課稅強化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간의 課稅의형평성 제고
  - 非實名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差等課稅率 상향 조정
  - 實名에 의한 綜合課稅與件의 조기 정착
- 富의 축적에 대한 正當性 제고
  -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강화
  - 특정산업에 대한 支援은 원칙적으로 폐지
- (2) 土地보유와 양도과세의 강화로 投機所得의 원천 봉쇄
  - 地價上昇을 기대한 土地過多保有의 억제
  - 企業의 非業務用 토지보유기준의 대폭 정비
  - 금년부터 실시되는 土地過多保有稅의 적극 활용
- 不動産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課稅 강화
  - 地價體系의 一元化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課稅標準을 時價에 맞게 재조정
- 用途 및 形質變更등에 따른 開發利益 還收制度의 도입 검토
- (3) 經濟運用의 公正性 제고
  - 特惠와 부조리의 素地 제거
    -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한 認·許可 축소
    - 현실과 유리된 각종 법령과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不條理素地 제거
    - 公權力의 남용 및 利權介入 배제
  - 稅務行政의 과학화와 電算化등으로 信賴稅政의 정착
    - 지방조세심판소 설치

#### 다. 部門間·地域間 均衡發展

- (1) 근로자 복지증진과 中産層化 촉진
  - 最低賃金制의 適用業種과 對象企業을 段階的으로 확대
  - 학력간·직종간 賃金隔差의 縮小와 賃金體系의 합리적 조정
  -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 근로자 住宅마련 貯蓄에 대한 利子所得稅 非課稅 및 住宅購入資金融資 확대
    - 工團地域의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 건설 확대
  - 종업원 持株制度의 확충
- (2) 中小企業 육성과 경제력집중 완화
  - 中小企業 資金不足難의 타개
    - 第2 中小企業銀行 설립 추진
    - 第2 信用保證會社 설립으로 擔保貸出의 애로 개선
    - 中小企業創業支援節次를 간소화하고 創業資金 지원확대
    - 國民投資基金을 현행 重化學工業 위주에서 中小企業과 技術開發 支援 중심으로 전환
  - 大企業의 銀行依存度 축소
    - 大企業의 증자 및 公開를 강력히 유도
    - 系列企業群에 대한 銀行與信比率 축소
  - 大企業集團의 相互出資禁止 및 出資總額制度의 엄격한 운용
- (3) 地域均衡發展과 활력있는 農漁村 건설
  - 落後地域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地域間 均衡開發
    - 首都圈 지역의 工業團地조성 계속 억제
    - 大田以南地域의 工業化를 加速化하는 방향에서 西海岸地域을 집중개발
      - 群山, 木浦, 全州 및 光州 工團 등 工業立地 개발

• 道路, 港灣, 上下水道 등 관련 社會間接  
資本 投資 확대

- 廣域經濟圈域別 公約事業의 세부추진계획 마련

- 地方經濟活性化 도모

- 地方銀行增資, 지방생명보험회사 설립추진
- 地方創業 및 地方移轉企業에 대한 金融·稅制 등 지원강화
- 情報·技術 등 企業支援機關의 지방사무소 확대설치

- 農漁村工業化의 확산과 農漁村經濟 활성화

- 農工地區 45個所 追加指定開發(91년까지 250個所 개발)
- 水利施設 및 경지정리 등 農業基盤施設에 대한 政府支援 강화
- 農水產資金의 상환기간연장 및 農組組合費 減免 등 農業經營費 부담질감
- 低利營農·營漁資金의 공급확대(88:1兆6千億원)등 農漁村의 金融與件 개선

## 라. 國際化時代에 副應한 經濟體質 및 구조의 개선

(1) 對外開放의 지속적 國際經濟協力 증진

- 工產品의 完全開放에 이어 外換 및 자본의 점진적인 自由化 추진

- 外換集中制를 완화하여 증권·보험회사 등 기업의 外換保有의 自律幅 확대
- 外資導入法, 技術用役有成法을 개정하여 用役去來의 自由化幅을 확대
- 海外轉換社債의 株式轉換 및 「코리아 유러펀드」의 增資 허용 등 資本自由化의 基盤 확대

- 對外經濟進出의 본격적 추진

- 올림픽을 계기로 中共 등 未修交國과의 경제협력 및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 海外投資의 절차간소화, 금융지원 등 投資與件 개선
- 對外經濟協力基金의 지원규모 확대와 金利

引下 등 지원조건 개선

- 國際社會에서의 역할증대

- 經濟力 伸張에 상응하여 國際機構에서의 능동적 역할 모색
- 아세안 및 유럽공동체 등 地域協力機構와의 협력체제 발전

- 黑字基調 및 國際化時代에 맞는 國民意識 전환유도

- 外換不足時代의 觀念을 탈피하고 市場開放을 경쟁추진과 消費者 厚生增進의 계기로 활용

(2) 經濟體質 및 構造의 개선

- 產業構造調整의 촉진으로 先進產業構造 실현

- 기술집약적 有望業種의 成長能力 확충
- 傳統 輸出產業의 高附加價値化 촉진
- 경쟁력 弱화로 인한 構造的 不況產業의 합리화 추진

- 科學技術投資 확대

- 87年 GNP의 2.2% → 88年 GNP의 2.4%
- 工業基盤 技術開發事業의 확대 및 지원·강화
- 超傳導體 등 源泉技術開發을 위한 國策研究 開發事業 가속화

- 營農構造의 개편으로 개방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農業育成

- 營農規模의 확대와 營農機械化 등으로 商業農의 건실한 발전기반 구축
- 안정적 농가소득보호를 위하여 農業生產調整體制의 확립
- 農產物 加工產業의 육성 등 農產物 수요기반 확대

- 輸出入 關聯制度의 정비

- 輸出支援制度의 점진적 정비로 內需와 輸出 產業間 均衡發展 도모
- 현행 國產品 위주의 정부조달시책을 개선

\*